

다른 당이 간판을 바꿀 때 진보신당은 삶을 바꿉니다

2012년 3월



[총론]

우리가 사는, 살아갈 세상

위기, 야만, 성장만능, 불통독재

4대강 재능노조 3포세대 삼성백혈병
사교육비 최고은 월화수목금금금
정리해고 자살률이혼률 박정근 명박산성
세계금융위기방사능비 **용산참사**
구제역 광우병쇠고기 무노조 어버이연합
출산기피 비정규차별 천안함논란 뉴타운
한반도온난화 이주노동자추방
천만원등록금 석유중독 쌍용차사태 부자감세
김제동퇴출 후쿠시마 론스타먹튀 연평도
한미FTA 임금격차 88만원 골목상권붕괴
불공정원하청 에너지빈곤 사유화 도가니
핵발전증설 **강정해군기지** 국격 학교폭력

공존과 조절, 정의, 전환, 연대

희망버스 산별교섭확장 토건해체 청년고용
동일노동동일임금 기본소득 재생에너지
탈삼성 일자리나누기 4대강복원 **로컬푸드**
무상의료 자립생활 생활임금 이동권보장
녹색GDP 전태일의집 유기농혁명 토빈세
국공립대학네트워크 노동허가제 **탈핵**
탄소세 가족구성권 참여예산 이명박처벌
노동시간단축 정의로운전환
노사공동결정 톨레랑스 도시농업 **사회주택**
노후안심 대중교통 남북에너지협력 공영카드회사
안전한작업장 금융자본규제 OCCUPY
사회적경제 **앙떼르미땅** 동네도서관

2012, 선택의 열셋말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다
위기와 야만의 시대, 삶과 지구가 무너지고 있는 절박한 시점



평등하게, 생태적으로, 평화롭게, 연대하며 살기위한 근본적 변화의 시기
탈출과 전환, 살만한 세상으로 ESC < 정의 · 전환 · 연대 >

3중의 위기와 3중의 대안

#1. 총체적 위기, 총체적 야만의 시대

-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국제적 금융위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전 세계의 양극화, 성장만능주의의 결과인 지구적 환경파괴의 고통이 가장 취약하고 빈곤한 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음.
- 용산참사, 쌍용차사태와 같은 비극들은 한국사회가 정글의 야만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는 적신호.
- 월화수목금금금. 더 많이 일하지만 일할수록 불안하고 가난해지는 한국사회.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무책임사회.
- 오키나와보다 서울에서 더 가까운 후쿠시마,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핵위험. 국경을 넘나드는 기후변화의 재앙들. 석유에 기반한 현대문명은 한계점에 와있음.
- 삼성으로 표상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정치·사회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기존의 정당들은 무기력하거나 무능력으로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음.

#2. 우리의 삶과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

- 현재의 고통들은 경제 위기, 에너지환경 위기, 정치 위기가 결합된 구조적이고 체제적인 것임을 직시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야만적 결과들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삶과 지구라는 터전을 회복불가능하게 무너뜨리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음.
-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빈곤은 확산되는 역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사회는 더 가난해지는 모순.
- 99% 운동에서 확인되는, 도처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지만 기존의 금융, 정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는 어디서도 잡히지 않는 위기의 위험상황.

#3. 위기에 필요한 것은 반창고가 아니라 수술이다

- 위기가 구조적이고 체계적인만큼 반MB만 외쳐서도, 지나간 정권의 그림자만 쳐다보고 있어서도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내놔야 함.
- 대량생산 대량소비, 노동과 자연에 대한 착취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전제하는 과거의 노동복지 체제와, 그것의 단순한 확장인 보편적 복지 구호 역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대안의 방향은 부분적인 해법을 넘어 기존의 노동체제, 정치체제까지를 대체하는 전반적이며 또한 근본적인 변혁과 전환이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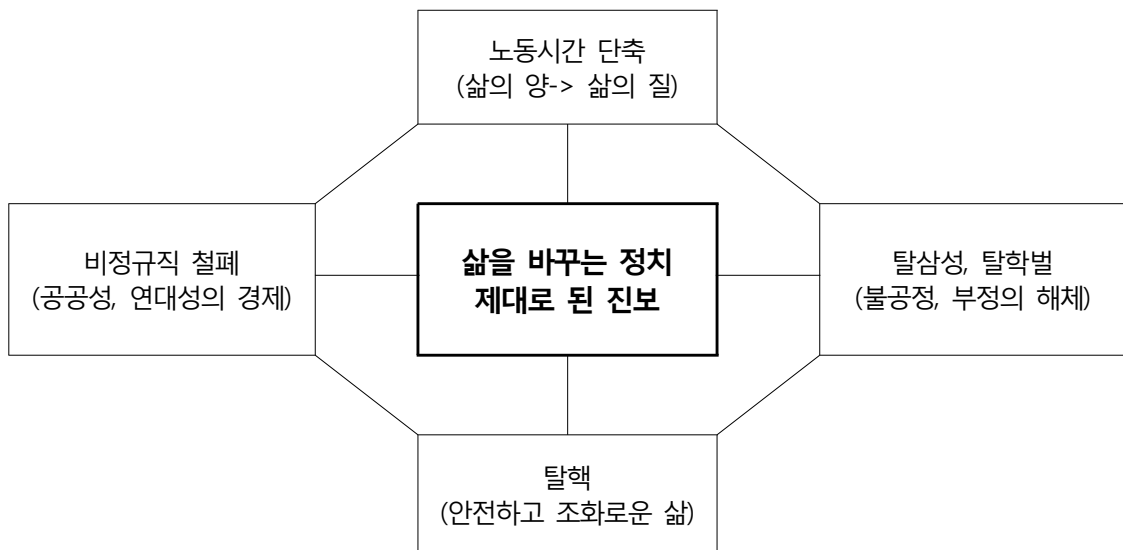
#4.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답이다

- 현재의 위기가 다중적이듯이, 그 대안 또한 경제적으로 탈자본을 지향하며, 생태 문화사회로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정치 방식의 변화를 포함해야 함.
- 가장 급진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기에서 진보신당이 표방하는 근본 진보, 선명 진보가 가장 풍부하고 구체적인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음.
- 시급하고 현실적인 요구로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와 금융시장 규제, 탈삼성, 탈핵과 에너지 전환 등을 제시하며 다른 삶, 지속되는 삶, 인간다운 삶을 제안함.

| 3중의 위기 | | ▶ | 3중의 대안 | |
|-----------|------------------------------------|---|----------------------------|--|
| 경제 | 고삐풀린 금융 약탈자본주의, 99%의 빈곤 | | 탈자본, 공공성, 연대의 경제 | |
| 에너지, 기후변화 | 핵사고, 기후격변, 자원고갈 | | 생태/문화 사회 전환 | |
| 정치 | 불통가가, 정당정치 실종, 선출되지 않은 권력 (ex. 삼성) | | 다양성의 정치, 참여와 소통, 민주주의의 민주화 | |

2012, 삶을 바꾸는 정치

제대로 된 진보, 진보신당



탈탈탈! 한국사회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5가지

1.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 삼성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3.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2-6-5-4(2) 학제로 개편
- 3)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5.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 1) 한미 FTA를 차기 국회의 의결로 폐기
- 2) 추가 자유무역 협정 추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으로 전환

톡톡톡! 진보신당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6.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7.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2) 부동산,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3) 종교인 과세 등 추가 세원 확보 등으로 총 71조원의 복지재원 확보

8.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3)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9.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 1) 진료비 상한제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 3) 청년실업부조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 4)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0.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 1)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2) 4대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
- 3)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4) 강정 해군기지 등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5)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탈핵 2030!

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 현황 및 취지

-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핵에너지 확충을 추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이명박 정부 뿐이며, 유럽 등에서 이미 가시화된 독일식 탈핵 시나리오 돌입이 시급함.
- 2030년을 목표점으로 역산(back-casting)하여 에너지 수요 조절과 에너지 믹스를 재산정하고, 실현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절약 > 효율화 > 재생에너지 확대 순으로 정책 순위를 가져가고, 이를 달성할 수단을 구체화해야 함.

<표> 주요 핵발전국의 전기소비 및 재생에너지 비율 변화

| | 1998-2008 전기소비 증가(%) | 2000-2008 재생전기 비중 (%) | 1998-2008 핵발전 비중 증가 | 핵발전 정책 |
|-----|-------------------------|--------------------------|------------------------|------------------|
| 독일 | 5 | 6.4 → 16 | 31 → 23 | 폐기 |
| 영국 | 7 | 3.5 → 6 | 29 → 14 | 거의포기에서 계속으로 |
| 스페인 | 57 | 17 → 21 | 31 → 18 | 계속 |
| 일본 | 6 | 거의 변화없음 | 36 → 25 | 계속 (※후쿠시마 사고 이전) |
| 한국 | 90 | 0 → 1 | 43 → 36 | 계속 |

* 이필렬, 「한국에서 에너지전환이 가능한가」(2011)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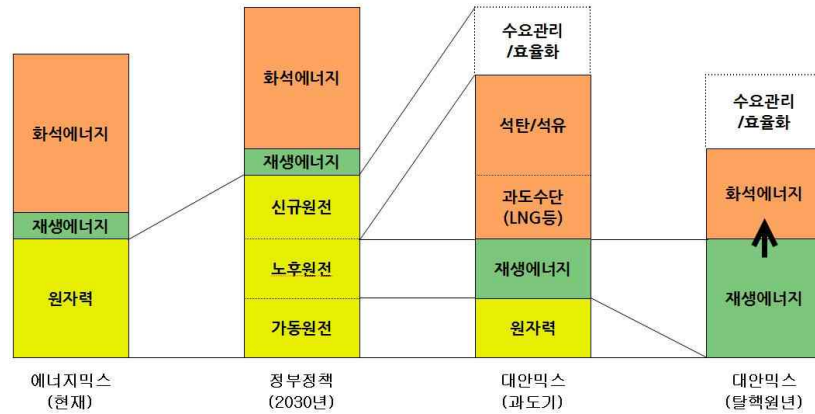
○ 세부 추진방안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 삼척, 영덕 신규부지 선정 철회, 고리 1호기 및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건설 중인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 탈핵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핵발전소 퇴출, 에너지 대체 단계적 실행

- 부적격 부지인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 핵폐기물 처리방식 재검토
- 원자력문화재단을 자연에너지재단으로 전환

<그림> 탈핵 에너지 전환 기본 개념



* 김현우 외, 『탈핵』 (이매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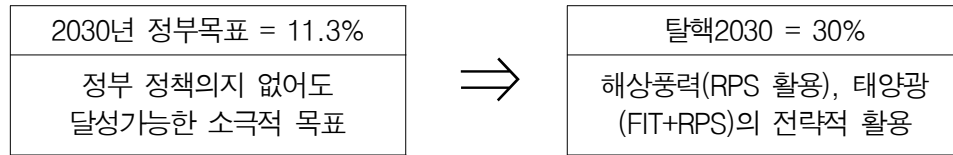
- 현재 총 전력생산 중 31% 가량인 핵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대체, 퇴출시킴
- 신규(예정)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수요관리/효율화 통해 대체
- 노후 핵발전소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통해 대체
- 과도수단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피크시간 대응이 용이하며, 열공급을 함께 할 수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 증설 (러시아 가스관 도입, 남북한 협력)

<표> 현 가동 핵발전소 수명을 30년 기준으로 할 때 폐쇄 예상과 2030 시나리오 비교

| | 2010년대 | 2020년대 | 2030-34년 | 2035-39년 | 2040-44년 |
|-----------|------------------------|--------------------------|---------------|----------|----------|
| 폐쇄 발전소 | 1 | 9 | 16 | 20 | 1 |
| 가동 발전소 | 20 | 12 | 5 | 1 | 0 |
| 2030 시나리오 | 2012년 고리, 월성1호기부터 가동중단 | 단계적 폐쇄 연동하여 에너지 수급 목표 달성 | ← 2030년 탈핵 실현 | | |

-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연장 가동 없이 폐쇄하고 건설중인 핵발전소 건설 및 신규 선정을 중단한다고 할 때, 가동수명을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34년까지 전체 핵발전소의 3/4이 자동 폐쇄됨.

- 202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그리드-패리티(Grid-parity)가 도래하여 자발적 보급이 더욱 증가가고, 에너지 효율화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남은 5기의 발전소도 조기 폐쇄 가능.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 30*4 플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2005년 대비), 전력소비 30% 감축, 전력 30%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혜택 폐지로 에너지다소비산업 효율화 유도
- 에너지 관련세제 통폐합하고 화석에너지에 탄소세 추가 도입
- 대도시 에너지 자립률 법제화, 도시 에너지 효율화 종합 프로그램(건축물 에너지 등급제 도입과 건축물 개량사업, 대도시 혼잡통행료 확대),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서남해안 풍력, 동네 태양광에너지 확충 : 발전차액지원제도(TIF) 부활,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요건 강화
- 신축, 증개축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의무를 상향(30%로)하고 기존 공공건물도 재생에너지 목표 도입, 민간건물 지붕 임대 태양광 설치 사업
- 에너지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및 지역공동체 피해 방지(고용연계 재교육, 정의로운 전환 펀드 조성)
- 중소기업, 지역중심 재생가능에너지 산업 육성(숙련, 금융 지원)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 개성공단엔 재생에너지 부품공장 설립,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러시아 가스관의 평화적 효과적 이용을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 설치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 공동 논의/대응기구 구성과 탈핵로드맵 추진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 현황 및 취지

- 한국 사회 전체로 축수를 뺏는 이견희 일가의 권력은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불법, 편법, 탈법적 지배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권력 기반을 해체해야만 ‘삼성 공화국’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음.
- 재벌 일가의 권력 기반은 출자총액 제한 등의 부분적 규제책을 선별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해체될 수 없음. 재벌 권력의 토대가 되는 주식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전면 개혁해야만 재벌 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음.
- 삼성이 노동자-국민을 지배하는 ‘삼성 공화국’이 아니라 노동자-국민이 삼성을 통제하는 ‘노동자-국민 기업, 삼성’으로 전환해야 함.
- 탈삼성의 궁극 목표는 단지 재벌 일가의 일부 전횡의 규제나 삼성 그룹의 해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통해 삼성 계열사들이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 지역사회와 공생하며 이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부응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 세부 추진방향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 2011년 8월 현재, 국민연금은 약 238조원을 채권에, 약 75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내 거대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로 떠오르고 있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소유 지분이 이미 재벌 일가 지분보다 많음. 2011년 12월 현재,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소유 지분이 5.17%인 데 반해 국민연금은 5.95%를 소유하고 있

음.

- 삼성 계열사들의 지배 주주권을 획득하는 데 드는 준비비용은 약 15조원.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하고 경영에 적극 개입한다면, 삼성 계열사들을 국민 기업으로 전환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 한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우량기업 삼성전자 등에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를 집중. 이견회 일가 소유 지분을 능가하는 지배 지분을 확보.
- ☞ 국민연금 소유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여 삼성 계열사 경영에 적극 개입. 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대표 위원,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의 추천 과정을 공개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다 활성화함.

2) 이사회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 한국의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앵글로색슨 모델의 폐쇄형 이사회 구조를 따르면서 사실상 재벌 일가의 과두적 지배의 온상이 되고 있음.
- 반면 독일 등에서는 노동자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사회 참여가 보장되며 이들에게 정보가 개방됨. 독일의 공동결정제의 경우, 종업원 2,001인 이상 규모 기업은 '총감독 이사회'와 '경영 이사회'의 이원적 이사회 구조를 취하게 되어 있으며, 노동자평의회가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로 총감독 이사회에 참여함. 경영 이사회는 총감독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여기에도 노동자 선출 이사가 일정 비율로 참여.

- ☞ 종업원 5,000인 이상 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지배구조 개혁. 노동자가 경영 사안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며 전 종업원이 참가하는 노동자평의회를 설치. 독일식 이원형 이사회 구조를 도입하며,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한 노동자 이사가 최소한 주주 총회 선출 이사와 동수가 되게 함.

- ☞ 노동자 선출 이사 외에도 소비자, 유관업체, 지역사회의 대표가 공익 이사로서 총감독 이사회 수준에서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 현황 및 취지

- 2011년 8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는 86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9.4%를 차지함. 또한,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51.3,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은 51.7, 여자 정규직은 66.4, 여자 비정규직은 40.5 정도로 격차가 발생함.
- 전체 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5.1년, 비정규직 평균 근속년수는 2.1년이며, 비정규직 노동자 중 근속년수 1년 미만 단기근속자 비중은 56.0%로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83~99%에 비해, 비정규직은 32~37% 수준에 불과함.
- 2006년 비정규직법을 제정했지만,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737만 → 2007년 861만 명 → 2011년 865만 명으로 큰 변화가 없음. 또한 2006년 법제도의 특징은 차별 시정 및 기간 제한 등 사후 대책 중심의 대책이었으며, 특수고용노동자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었음.
- 그 결과, 비정규직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2년씩 교체사용(회전문 효과)하거나, 기간제 비정규직 대신 사내하청,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충당(풍선효과)해,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가 일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축소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랜드 파업, 동희오토 파업, KTX 여승무원 파업,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 재능학습지교사 장기 투쟁 등 핵심적 노사갈등이 모두 2006년 비정규직법의 한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함

○ 세부 추진방안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입법화: 임신·출산·병가 휴직 등에 따른 결원대체, 계절적 일자리,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 등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상시적 업무에는 정규직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근절
- 파견제 폐지: 직접고용 원칙을 훼손하는 파견법 폐지
- 노무 도급 중심의 위장도급 금지: 적법한 도급과 도급을 가장한 노동력 파견을 구분하여 위장도급에 따른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제
- 정리해고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제한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근로기준법 개정: 법원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 개념을 명확히 규정
-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의 자율적 해결을 중시한다는 법의 취지를 살려,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까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확대 적용
- 사회보장법 개정: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법의 경우 그 대상을 노동자에 엄격히 한정할 경우 오히려 사각지대를 확대해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역행하므로, 타인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의무 적용을 확대, 임의 탈퇴 등 독소 조항을 삭제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 상시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원칙 적용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구성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인력감축 정책 중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 공공기관 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탁 사업에 대해 업무 위탁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실시: 공공기관 또는 특정 규모(예: 1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고용비중 실사를 통해 산업별·규모별로 노사정이 정하는 고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에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 시정 조치 요구. 시정계획 이행 여부에 따라 정부 조달 사업 및 위탁 사업 입찰에 가점 또는 감점 부여
- 공정임금제: 정부 및 공기업 위탁 사업 참여 노동자의 임금을 해당 업종, 지역 생활비 등으로 고려해 지역 노사정이 협의한 공정임금 이상으로 책정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근로기준법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 명문화
- 기간제법 상 차별시정 신청권을 개별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산별노조 포함)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강화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 기업이익분배법 도입: 기업이윤의 주주배당이 지난 2년 평균 주주 배당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거나, 동종 업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익배당금에 상응하는 사회보장기금 납부 의무화

※ 프랑스 기업이익분배법: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지난 2년 동안 지급한 주주 배당액보다 당해 연도 배당액이 많을 경우 이익배당금을 해당 기업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 직책 연봉, 경력에 관계없이 고루 배분되어야 함.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현황 및 취지

-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바탕 : 특정 문제들에 대한 대중 요법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 발달’과 ‘협동’의 교육 철학에 입각하여 교육 체계와 내용을 재편
-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 : 교육 과정의 특정 단계만이 아니라 유아 교육에서 고등 교육(대학)에 이르는 교육 과정 전반의 혁명적 변화를 추진
- 한국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 : 공교육 붕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록금 폭등,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학벌 사회 등 한국 사회의 교육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종합적 처방을 제시
- 학교 현장의 민주화 : 교육 혁명의 현장인 각급 학교에서 직접 민주주의, 당사자 민주주의를 통해 교육 주체 간 협력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 건설

○ 세부 추진방안

-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 교육 목표 : ‘인간 발달’과 ‘공동체적 협동’의 기초(L. S. 비고츠키의 교육 철학에 입각)에 따라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교육 등 각 발달 단계의 교육 목표 제시
 - 교수학습 목표 : 학문, 지식 습득의 양적 기준이 아닌 발달 기능 중심 / 개념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는 진개념(genuine concepts)의 형성을 통한 개념적 사고 기능 발달 / 지성, 정서, 의지의 발달을 전 교과에 공통된 지향으로 설정 (예: 악기 연주 능력 습득은 필수로, 미적분은 선택으로)
 - 교수학습 방식 : 집단적 과정과 개별적 과정의 결합 / 새로운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평생 학습을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될 '학습하는 습관'과 학습의 중요성 및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 (과도한 양적 부담과 상대 평가로 인한 고통이 반드시 줄어야 함)

- 평가 체제 : 발달적 평가 및 발달기록부
- 교사 : 학생 이해를 위한 관찰과 진단, 처방의 전문가이자 교육 과정 편성과 평가의 주체
-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 강화
- 영역 : 교과 영역 / 관심 특기 영역 / 자치 활동 영역
- 물적 토대 : 소인수 학급(교사 1인당 25인 이하) / 수업시수 감축 / 교과 내용 감축
- 시간 편제 : 오전 교과 활동, 오후 관심 특기나 자치. 주당 학습시간은 초등 20-25시간, 중등 기초 26시간, 중등 심화 30시간 정도 (5일제 수업 기준)
- 교과와 분화와 통합 : 초등 단계의 낮은 수준의 분화에서 시작하여 중등 단계에서 점진적 세분화와 아울러 범교과 주제 활동 결합
- 이질적 학습 집단 구성 (수준별, 능력별 집단 편성은 금지)
- 학습 결손 보충 과정 및 학습 장애, 행동 장애, 정서 장애를 포함한 특수 교육 영역에 대해 적극 지원

☞ 이러한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해, 공교육 붕괴 속에서 일부 학교만 혁신학교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교육 혁명을 단행

☞ 그간 '핀란드형 교육', '덴마크형 교육' 등으로 단편적으로 논의되던 교육과정 혁신론을 체계적인 종합 처방으로 제시한 것

☞ 학교 폭력 문제의 근원도 입시 경쟁 교육에 따른 공교육 붕괴에 있는 만큼 이 공약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근본 처방이기도 함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하고 고교 서열제를 폐지하는 2-6-5-4(2) 학제로 개편

- 유아 교육의 기본 학제 포함 : 만 45세 유아들이 다니는 유아 학교를 기본 학제에 포함. 학부모의 양육권 보장 차원에서 의무 교육이 아닌 무상 교육으로 기본 학제에 포함
· 초등 교육과정의 선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의 발달 과정에 조응하는 교육 내용
· 유아 교육 관리는 단일한 국가 기관으로 일원화 (선진국은 교육부에서 관리)
- 중, 고등학교 전환 1단계 : 고교 서열 체제 폐지

- . 입시 기관화되고 상류층 학교로 변질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폐지
- . 학교 선택제를 폐지하고 근거리 배정 제도로 전환
- 중, 고등학교 전환 2단계 : 통합중등학교(중학교 + 고등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5년의 통합중등학교로 통합
- . 현재 일반계고와 전문계고로 분리된 복선형 학제를 통합중등학교의 단선형 학제로 통합 (현재의 복선형 학제는 전문계고 졸업자들을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군으로 몰아넣는 효과가 있음)
- . 통합중등학교에서 보편적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을 병행하여 종합적 인간 발달 교육으로 전환

☞ 건국 이래 큰 변화 없이 지속되던 6-3-3-4(2) 학제, 복선형 학제(인문계고, 전문계고 분리) 등을 최초로 혁명적으로 재편하자는 것

3) 입시 경쟁, 학벌 사회를 뒤엎는 대학혁명 :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모든 국공립대를 통합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으로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로 통합. 이를 통해 국립대 법인화 등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편을 중단하고 반대로 공공적 대학 체계 구축
 -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지방 캠퍼스에 대한 전략적인 국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의 토대 마련
 - . 정부의 고등 교육 예산으로 지원 받는 사립대(정부 책임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사립대들을 점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흡수(=공공화)
- 대학통합네트워크에서 공동 전형, 공동 학위제를 실시하여 입시 경쟁, 대학 서열 체제, 학벌 사회를 점차 해소
 - . 신입생 선발 단위는 대학별, 학과별이 아니라 전체 대학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함 (공동 선발)
 - . 대학 입학 자격은 고교 내신 성적과 계열별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해 부여
 - . 대입 자격을 획득한 학생들은 먼저 1, 2, 3 지망으로 대학을 지원해 배정 받고 거주지별 배정을 원칙으로 함

- . 학점 취득은 대학통합네트워크 내에서 개방
 - . 교양과정 이수 후 전공과정에 진학할 때 희망 학과를 지원하도록 하되, 전공별로 학위 수여 정원을 두고 정원 초과 인원에는 지속적으로 전과를 추진 (전공과정 진학 시 특정 캠퍼스에 집중도가 높을 경우 교양과정 이수성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 사립대를 지속적으로 대학통합네트워크에 결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교양과정에서 전공과정으로 진학 시 일정 비율을 상호 개방
 - .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모든 졸업생에게 전공이 표시된 동일한 공동 학위를 수여하여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
 - .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
 - . 일반대학원은 학부과정의 성적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구체적 전형방법은 학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 전문대학원은 지역균형인재 등용제도의 취지에 따라 동일 학구의 학부 출신에게 우선권을 부여 함
-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 . 대학통합네트워크 내 대학들의 경우는 입학사정관제, 수준별 수능, 대학별 본고사를 폐지
 - .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통과한 학생들에게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 부여 (전기 모집)
 - . 대학통합네트워크 바깥의 사립대의 경우는 내신 성적과 대학별 고사 등을 통해 자율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 (후기 모집)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 현황 및 취지

- 한미FTA의 본질은 '제도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미국식 시장근본주의를 국내에 이식하는데 있음. 즉 한미FTA는 단순한 상품의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가의 정책권한을 위축시켜 '시장'을 팽창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금융자본의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협정임.
-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후퇴방지 조항(래칫),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비위반 제소 등 한미FTA 협정문에 가득 찬 독소조항은 사실상 초헌법 역할을 하여 국가의 경제정책을 무력화시킴.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킬 산업정책 추진은 물론, 복지국가로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 것임. 따라서 한미FTA는 반복지 정책에 다름 아니다.
- 한미FTA는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잘하는 대기업'에 자원을 집중 배분하는 반면 경쟁력 없는 농업, 서비스업 등에는 사형선고를 내리는 협정임. 또한 농민, 영세상인 등의 몰락을 부추기는 '반서민 협정'임. 외국인 투자 증대와 국내 기업 가치 상승 등 수치상으로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서민 소득 악화로 국민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될 것임.

○ 세부 추진방안

- 한미 FTA는 국회의 의결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충분히 가능함. 부분적 재협상은 가능하지도 않고,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음.

- ☞ 민주통합당: 11. 22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 후, '한미FTA 비준안 무효화' 장외 투쟁 선언 → 12. 20 'ISD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합의 후 등원
- ☞ 통합진보당: 12. 20 민주통합당 등원 결정에 대해 “한미 FTA의 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 등원은 우리의 주권을 예측하고 서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일” 비판 → 12. 29 “소수야당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 등원 결정

- 한미FTA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이 예상되는 한중FTA 등 추가적인 자유무역 협정도 추진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①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통상
- ② 인권, 교육, 에너지, 식량 등 필수 공익재는 보호되는 무역
- ③ 국민주권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무역

<표> 부자가 본 한미 FTA, 서민이 본 한미 FTA

| | | |
|--|-----|----------------------------------|
| 서민 “집값이 오른다” | vs. | 토건자본·강부자 “부동산 거품 지속되다” |
| 정부연구기관도 FTA로 인한 부동산 정책 후퇴 우려 “토지구제를 포함한 모든 공적 규제조치에 대한 분쟁가능성” (국토연구원, 2008) | | |
| 서민 “약값도 오른다” | vs. | 제약회사 “환자 주머니 사정 관심 없다” |
| 약값 결정에 다국적기업·국내 제약회사 참여 확대 ‘의약품허가-특허 연계조항’으로 복제약 시판 제한 | | |
| 서민 “전기세, 가스비, 교통비, 다 오른다” | vs. | 투기자본 “오를수록 돈 번다” |
| 한전 등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확대 인정으로 민영화 가속, 공공요금 인상 | | |
| 농민 “비료값도 안 나온다” | vs. | 다국적 농산물 자본 “관세 철폐, 이 날을 기다렸다” |
| 정부 추산 농업 피해 15년간 12조 6,600억 원 양돈협회, “한·미 FTA로 양돈 농가 30% 폐업 예상” 정부조달양허기관에서 지자체 배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대신 ‘어렌쥬’ 나을 판 | | |
| 중소상인 “대형마트 때문에 죽겠다” | vs. | 이마트, 월마트 “저인망 골목 상권 시대 도래” |
|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FTA 장애”(2010. 10) | | |
| 노동자 “정리해고, 비정규직 못 살겠다” | vs. | 투기자본·재벌 “구조조정, 먹튀가 돈 된다” |
|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미 FTA 고용효과는 신기루” (2010. 8) 투기자본의 구조조정(쌍용자동차), 먹튀(론스타)로 실업, 비정규 저임금 노동 양산 | |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 현황 및 취지

- 연간 노동시간 2,193시간, OECD 최고: 한국인은 1년에 2,193시간을 일 함. OECD는 평균 노동시간은 1,749시간. 연간 444시간, 약 2달을 더 일하는 과로 사회!!
- 잠 못 자는 한국인: 한국인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 이에 비해 프랑스는 8시간 50분, 미국은 8시간 38분, 스페인은 8시간 34분임.
- 잃어버린 휴가, 10일: 스위스 은행 UBS가 발표한 주요 도시 노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연간 휴가 일수는 12일. 파리(28일), 베를린(28일), 도하(25일)의 절반도 못 채우는 수준
- 과로사회 = 위험사회: 한국의 산재 사망자 비율은 10만명 당 20.99명!! 두번째로 높은 멕시코(10명)의 두배!!

○ 세부 추진방안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특별법 제정
- 노동시간 1,800시간 초과 시 매 200시간 추가마다 노사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 (* 프랑스는 연간 노동시간 1,605시간 상한. 200시간마다 노사협의 및 노동부 장관 승인 의무화)
- 주당 초과노동시간 10시간으로 제한 (*유럽연합은 주당 초과노동시간 8시간으로 제한)
- 상습 초과 사업장 특별 현장점검 의무화

-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휴일 노동을 연장 근로 제한 시간에서 제외, '탈법적 초과노동'을 인정한 관행 개선
-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제한 제외 특례 대상을 최소화
-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제 도입 추진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간 2교대 중심의 교대제 전환시 전환 지원금 확대
-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야간 업무 규제.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 사업주의 초과노동 유인 축소: 연장/야간 노동 수당 할증을 각각 50%에서 100%로 인상
- 노동자의 초과 노동 유인 축소: 연장/야간 노동수당에 대해 최고세율 부과 (현행 최고 세율 38%, 진보신당 증세안에 따른 최고세율 50%)
-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현실화로 제조업 야간노동 축소 유도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 주40시간제 도입 당시 축소된 휴일 7일을 복원, 기본 휴일을 22일로 확대
(※ 주40시간제 이전 기본 휴일: 월차 12일 + 연차 10일)
- 연차 조건인 1년 만근 규정을 삭제,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월할 부여
(※ 현행법은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년 후 발생할 연차를 앞당겨 쓰는 방식)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 공휴일 부활: 한글날(1990년), 식목일(2006년), 제헌절(2008년) 등 축소된 공휴일 부활
- 대체휴일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도입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 현황 및 취지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로 인한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27조원으로, 연평균 16.45조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MB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1년에 16.45조원의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수의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이후의 세수 확보 규모는 17조원을 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등 각종 조세감면조치들은 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집중될 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가능하면 억제해야 합니다.
-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과세, 파생상품 거래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 감세조치를 철회(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헌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하는 등 불로소득에 중과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역시 불로소득의 일종임.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은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일 때에만 종합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함.

○ 세부 추진방안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각종 감세조치를 철회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008년도 세율로 환원함(단,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함).

-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함.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과표 3억원 이상에 적용)을 38%에서 50%로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과표 200억원 이상에 적용)을 22%에서 35%로 인상.
- 대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조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각종 세액공제 및 비과세/소득공제 제도 정비를 통해, 조세지출규모를 현재보다 10% 축소함으로써 국세감면율을 현재의 13.70%에서 12.33%대로 낮춤.

<표> 개정 소득세율 안

| 과세표준 | 2008년도 세율 | 현행 세율 | 개정안 |
|----------------|---------------------------|---------------------------|---------------------------|
| 1200만원 이하 | 8% | 6% | 6% |
| 1200만원 ~4600만원 | 96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7%) |
| 4600만원 ~8800만원 | 674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6%)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650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26%) |
| 8800만원 ~3억원 | 17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742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 3억원 초과 | 1766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9010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35%) | 9162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50%) |

<표> 개정 법인세율 안

| 과세표준 | 2008년도 세율 | 현행 세율 | 개정안 |
|------------|------------------------|-----------------------------|-----------------------------|
| 2억원 이하 | 13%(1억원이하) | 10% | 10% |
| 2억원 ~200억원 | 13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5%) | 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0%) | 20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5%) |
| 200억원 초과 | 13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5%) | 39억80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 49억74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5%) |

- 이상의 부자 증세, 대기업 증세 조치를 통해 늘어나는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17.44조원 정도이며 MB 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증가분 16.45조원을 합치면 총 33.89조원 가량의 재원이 확보됨

2)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 그 대신 현행의 주식거래세는 폐지함. 또한 현재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커녕 거래세조차 과세되지 않는 바(전면 비과세),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나 일단 거래세를 도입함.
- 종합부동산세는 MB 감세 조치의 일환으로 세율이 인하되었는 바, MB 감세 이전인 2008년 세율로 환원시키고 (단, 부부합산과세는 위헌결정으로 반영하지 않음), 과표를 공시가격의 80%만 잡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100% 과세함. 재산세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함.
- 현재 이자 및 배당소득의 경우,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을 때에만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함.

※ 세수 추계

-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대략 7.41조원이나(세율 20% 적용) 주식거래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액 3.66조원을 제외한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74조원임.
- 한편 파생상품거래세의 경우, 파생상품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현행 주식거래세 세율의 100분의 6인 0.03%로 함(통합민주당의 안은 0.01%임).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액은 대략 3.33조원임.
- 종합부동산세 세율 환원에 따른 세수 증가분은 MB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 증가분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만 반영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60조원임.
-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세율에 연동되므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양도소득세 세수도 증가함. 이에 따른 순세수 증가분은 대략 3.82조원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 증가분은 대략 0.79조원으로 추정됨.
- 지금까지의 세수 증가액을 모두 합산하면 (MB 감세 철회 및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조세지출 축소 등으로 인한 세수 증가액까지 모두 포함), 전체적인 세수 증가액은 대략 49.17조원에 이름.
- 또한 이외에도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및 미술품과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등 추가 세수증가액(현재로서는 세수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우나 일단 0.5조원 정도로 추정)을 감안한다면 총 세수증가액은 대략 49.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 현황 및 취지

- 현재 정부와 보수야당의 주택정책은 기존의 주택정책을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주택을 '투기판'에서 빼내오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택공급률이 올라가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세입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우스푸어'를 양산시키게 됨.
- 공급을 중심에 놓는 주택정책은 이제 뒤로 물러나야 함. 기존 주택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고, 멸절한 집을 고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
-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2007년부터 100%를 넘어섰으며, 산술적으로 모든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의 총량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주택불균형의 가장 핵심은 공급체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배체계에 있음. 헌법과 법률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토지 및 주택을 적정가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의 '분배'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 용산참사는 6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불도저식 도시개발 사업의 종말을 알리는 시대적 징후였음. 무엇보다 도시개발의 공공개발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고, 주거 및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한편 대책이 없는 강제철거가 금지되어야 함.

○ 세부 추진방안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 통계조사 및 세무조사 즉각 실시
- (단기) 비 자가주거 주택에 대한 수용계획 마련 및 법 개정
- '공토법' 상의 '비주거용 주택의 수용 절차' 명시
- '임대주택법' 상에 수용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 방안 명시

☞ 수도권 중소형 주택 우선, 1호당 공시지가 기준 2억5천만원 편성

☞ 국민주택기금 우선 활용, 국민연금 투자계획에 반영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 무주택자의 주택대출을 우선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매입하여 공공대출로 전환
- 자가 소유자의 경우, 대출비율이 집값의 50%를 상회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대출을 인수하여 사회주택으로 전환 유도
- 장기적으로 주택 관련 대출제도를 정책금융으로 일원화하여 공공관리 강화
- '주택대출인수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주택대출에 대한 공공인수의 근거를 마련함.
- 현재의 주택금융공사를 신용보증 기능보다는 직접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고, 신규 건설되는 주택청을 통해 사회주택과의 연계성을 강화함.
- 주택대출 인수채권을 발행.
- 주택대출 주택의 사회주택화를 통한 자산화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3)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 이명박 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만, 총 3차례의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실상 실패하였음. 이는 공급물량 확대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실효성이 낮은 대책이었기 때문임.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 전세자금 대출조건 완화(무주택조건 폐지)
- 211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 조정(금리 인하 등)
- 818 전월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면세, 주택재개발 사업시기 조정, 임차인의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진보신당은 이런 전월세와 관련하여, 이를 ‘전년 연동제’가 아니라 ‘소득연동제’로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제안함.
- 소득분위별 가구 소득 변동률에 기반한 전월세 상한기준 마련
- 1가구 10가구 이상자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 ‘임대주택법’ 상에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규정 명시
- ‘주택법’ 상에 소득 연동형 전월세 상한제의 실시에 대한 근거 마련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 ‘용산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여 전면 재조사를 실시함.
- 용산참사 재발 방지 법안을 목록화하여 일괄 발의, 제정하는 형태로 용산참사의 후속조치 완료
- ‘도시개발법’ 개정: 모든 도시개발의 공공 통제 강화, 선 대책 후 사업추진의 원칙 명시
- ‘강제퇴거 금지법’ 제정: 실거주자의 동의 없는 주택의 퇴거 조치 및 철거를 원천적으로 금지함.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주거관리형 주택개선사업 강화’

-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거지재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함.
- ‘주택법’ 개정: 주거관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에너지효율화사업에 대한 근거 명시
- ‘주거지재생법’ 제정: 기존의 정비사업에 포괄되지 않는 제3섹터 방식의 주거지재생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물리적 개량과 사회적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명시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 현황 및 취지

- 현 복지 제도는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나머지 복지”로 조건이 까다로워 수백만에 이르는 실질적인 빈곤층이 아무 혜택도 못 받으며,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해서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렵고, 복지 수혜층이 빈곤을 탈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
- 구시대적 제도(선별적 최소 복지)로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발생하는 삶의 위기를 대응하지 못함. 선별적인 최소제공 복지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며, 부동산, 금융, 교육, 소득 불평등이 모든 세대에 걸쳐 더욱 크게 일어나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삶”이 현 세대뿐만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빈곤과 위기의 삶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
- 보편적 복지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특히 워킹푸어, 하우스 푸어, 에듀 푸어 등 생활형 빈곤을 해소하고, 계층간 및 지역간 불평등을 완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 요인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임.

○ 세부 추진방안

- 1) 진료비 상한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 질병에 걸린 환자가 1년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의료비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
 -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비급여(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평가하여 환자

의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급여(건강보험적용 대상)로 편입.

-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하나 하나마다 돈을 지불해 주는 방식(행위별 지불보상제도, 행위별 수가제도)을 질병별로 묶어서 포괄적으로 지불하는 방식(포괄적 지불보상제도, 질병당 수가제)으로 전환.
- 질병 자체보다도 환자에 중점을 두고 예방과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기능을 재정립.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실업부조 도입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 신규실업자(청년) 및 장기실업자 대상 실업부조 도입. 일정 요건을 충족할 시 최저임금의 90%의 실업급여 지급.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 경제활동으로 인한 질병, 부상을 고용형태(노동자나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현재의 산재보험을 보편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대 개편.
- 고용보험 수급 자격 완화 : 급여 수급 요건을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자발적 실업자 급여 수급 제한을 없앴.

3) 청년실업부조: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자영업자와 신규실업자(청년)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도입 하여 실업자에게 최저임금 90%의 고용연대급여 지급

4) 노인기초연금

- 비정규직을 포함해 연금 미가입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
- 기초노령연금은 현행 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의 5%인 급여액(월 1인 91,200원, 부부 145,900원)을 월 25만원 수준으로 인상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 현황 및 취지

- 4대강 사업은 영원히 준공되지 않을, 아직도 목적이 불분명하고 온갖 역효과만 낳는 엄청난 범죄행위임. 홍수예방, 수자원 확보, 환경보전 등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이유들은 모두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으며, 모래가 재퇴적되고 보의 균열과 누수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4대강 사업은 한반도대운하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명칭과 내용을 위장하여 추진하면서 온갖 편법과 탈법을 수반했을뿐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검토도 거치지 않았음. 때문에 이 사업은 단지 '정책적 판단'이나 오류의 문제가 아닌 국정문란과 국토파괴 행위로 규정되어야 함.
- 차기 정부부터 4대강 복원이 큰 과제가 되겠지만, 이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반드시 가혹하게 처벌해야 함. 한반도대운하 때부터 이를 입안하고 정책논리를 제공하고 선전에 동참한 이들을 모두 조사해서 처리해야 함.
- 아울러 새만금, 평택미군기지, 강정해군기지,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등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실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사전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함.

○ 세부 추진방안

- 4대강 특별법(진상규명, 복원 시행 근거)을 제정하여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사업입안과 주도, 상위법령 위반과 편법,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유기 등)에 대한 조사와 복원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 한강부터 잠실과 신곡 수중보를 헐고 4대강의 16개의 불필요한 보를 철거하여 자연 침식과 퇴적을 유도함으로써 모두 독일 이자(Isar)강 모델로 복원
-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 . 강정마을 해군기지 중단, 생태 복원
 - .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하고 서해안 갯벌벨트 복원, 지역어민 보호 프로그램 시행
 - . 삼척,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 선정 철회
-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네덜란드 PKB모델) 도입

※ 네덜란드의 PKB(Key Planning Decision)는 국가의 도로사업이나 토지이용, 주택건설 등 국토개발 사업에 있어 내각, 의회, 시민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수립된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초기 보고서를 말함. 지방정부가 상세히 수립하는 국토개발계획은 모두 PKB에 기초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개발계획이 정부뿐 아니라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립됨.